

주거환경개선사업 복구 집중

“得이나…失이나” 논란

사업 속도 빠른 공영개발 수용분위기 확산
일부 주민 “낮은 감정가 보상 불가피” 불만

‘득(得)인가 실(失)인가’
대구 북구지역의 주거환경개
선사업 쏠림 현상을 두고 찬반
이 엇갈리고 있다.

대구시는 작년 10월 확정된
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’에 따
라 대구전역을 주거환경개선사
업과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
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
등 4가지로 분류, 대구전역은
총 273개 정비예정구역이 지
정·시행하고 있다.

이 가운데 11개 정비예정구
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으
로 지정됐고, 중구 1개소를 제
외하면 나머지 10개소가 북구
에 쏠려있다.

이와 관련, 사업지구 내 일부

주민들은 “공공기관이 땅을 수
용할 경우 지주들은 터무니없
이 낮은 감정가격으로 보상을
받을 수밖에 없다”고 불만을
드러내고 있다.

또 “민간개발과 비교되면서
감정가 시비가 많은 공영개발
을 기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
있다”고 반대를 주장했다.

하지만 지난해부터 아파트시
장이 급격히 침체국면으로 접어
들자 최근에는 공영개발에 호응
하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.

주공과 도개공 등 공공기관
이 올해 사업을 벌이는 주거환
경개선사업은 현재 북구 대현3
지구와 노원1지구는 각각 사업
시행인가와 정비계획수립 과정

을 마쳐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
되고 있고, 고성지구는 사업초
기 단계인 사업설명회가 오는
27일로 예정돼 있다.

특히 대현3지구는 3월초 사
업부지 내 지장물 조사를 거쳐
9월쯤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는
다는 일정을 세워두고 있는데
그동안 골칫거리였던 지주들의
감정가 시비가 예년보다 다소
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.

대구시와 북구청 주거환경정
비팀 관계자도 “북구지역에 주
거환경개선사업이 몰린 이유는
위치와 사업성 등이 열악한 탓
에 민간업체들이 철저히 외면
해 왔다.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
의 열기가 식은 상태에서는 사
업속도가 빠른 공영개발방식을
주민들이 원하고 있다”고 말했
다.

윤용태기자

yty@kyongbuk.co.kr